

신자유주의 개발의 상상력과 포스트개발: 공유경제를 중심으로*

이용균**

The Imagination of Neoliberal Development and Postdevelopment: Focusing on the Sharing Economy

Yong Gyun Lee**

요약 : 신자유주의 개발은 시장원리에 의한 효율성과 경제성장에 초점을 두면서 소득분배, 환경오염, 권력집중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신자유주의 개발의 대안으로 공유경제의 가치와 한계를 살펴보고, 포스트개발로서 공유경제의 미래를 모색하는 것이다. 공유경제는 2008년 세계경제 위기와 함께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공유경제는 제품의 사용 기간을 늘리면서 사회 전체의 소비를 감소시키고 자원 절약과 환경문제 개선을 가져오는 것으로 주목 받았다. 그러나 공유경제의 기업화가 나타나면서 노동착취, 세금부과, 인종차별, 소비자보호 등과 관련하여 다양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공유경제가 포스트개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유기업의 시장 의존도를 낮추고, 공급자-소비자 간 협력과 공유를 강화하고,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사회건설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주요어 : 신자유주의, 포스트개발, 공유, 공유경제, 공유기업

Abstract : Neoliberal development has brought about lots of problems on income distribution, environmental contamination and power concentration, focusing on the efficiency and economic growth by market principl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eal the value and limitation of sharing economy as the postdevelopment for the substitution of neoliberal development. Sharing economy has attracted a great deal of attention since the economic crisis in 2008. Sharing economy are regarded as valuable one which increases the duration of products, lessens the social consumption, deriving the conservation of resource and the improvement of environmental problems. However, the corporationalization of sharing economy brought about several problems such as labor exploitation, tax imposition, discrimination, and consumer protection. For postdevelopment, sharing-economy companies have to lessen the dependency of market, increase the collaboration and share between provider and consumer, and also pursue the pro-environmental and sustainable social construction.

Key Words : Neoliberalism, Postdevelopment, Share, Sharing economy, Share businesses

I. 서론

시장을 통한 판매, 교환 및 사회적 관계는 현 시대의 경제와 사회를 지배하는 핵심이다. 사회, 문화, 정치, 환경의 다양한 현상, 사건 및 경험은 생산성, 효율, 가치 등

과 같은 시장원리에 큰 영향을 받는다. 인간의 자유 의지와 이를 통한 경제적 실천은 인류의 역사상 가장 효율적 성장과 발전을 견인한다고 주장되는데, 이러한 시각을 대표하는 관점이 신자유주의(neoliberalism)라 할 수 있다. 개발 또는 발전은 인류의 역사에게 가장 친숙한 경제

*이 논문은 201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5S1A5A8014002).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조교수(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yonggyunlee@hanmail.net)

관련 용어 중의 하나일 것이다. 인류는 고대사회를 건설하면서부터 개발에 관심을 가졌는데, 개발이란 사회, 문화, 교육, 정치, 복지, 인권, 환경, 외교 등에서 ‘근대화’, ‘성장’, ‘진보’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국제개발협력단, 2013; Lawson, 2007; Simon, 2006). 개발을 국가 주도로 실천하였던 케인스주의 정책은 성장을 통한 분배를 강조하였으나, 개발의 규모와 범위가 증가하면서 시장실패(market failure)와 정부실패(government failure)를 동시에 경험하였다. 케인스주의 개발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신자유주의 개발은 시장원리에 의한 개인의 자유와 책임을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파생되는 생산성과 효율성 증가를 사회가 지향할 목표로 설정하였다(최병두 역, 2007).

하지만 시장원리에 따른 개발은 개인의 자유와 복지보다는 자본가에 유리한 경제시스템을 강화시키면서 문제점에 봉착하게 되었고, 다양한 스케일에서 개인 및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는 결과를 야기하였다. 성장 위주의 개발이 갖는 소득격차, 환경문제, 계급분리와 권력집중 등의 문제에 대응하고, 새로운 관점의 개발에 초점을 두면서 분배, 협력, 공정, 공유에 기반한 사회 개발에 초점을 둔 포스트개발(postdevelopment) 논의가 등장하였다(이용균, 2015).

포스트개발은 성장 중심의 전통적 개발담론에 반대하고, 지속가능한 개발과 맥락을 같이 하면서 대안적(반-)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Sidaway, 2014). 포스트개발은 권력관계를 벗어나 개개인의 공정성과 윤리성을 강조하는데, 공유경제(share economy)는 최근 포스트개발의 일종으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공유경제는 이용빈도가 낮은 제품에 대한 공유나 교환을 통해 현 시장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공유경제는 생산의 감소, 자원 소비의 감소와 환경문제의 해결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김집산 등, 2014; Schor, 2014)

공유경제는 인터넷과 휴대전화를 통한 제품과 서비스의 교환 및 구매에 초점을 둔다. 디지털 기술의 혁신이 없었더라면 공유경제의 아이디어는 탄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인터넷 기반의 기술은 정보 공유와 비즈니스 활동 등을 통하여 사회변화를 주도하고 있다(이희연·이용균, 2004). 공유경제는 사회 전반에 비용절감 효과를 가져옴과 동시에, 사회적 결속도 강화시킨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Koopman *et al.*, 2014).

공유경제는 2008년 미국과 유럽의 금융위기와 경제침

체를 계기로 주목을 받게 되었고, 서울 등 전 세계의 주요 도시정부는 공유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강병준·최무현, 2013; Marshall, 2015). 그러나 공유경제에 참여하는 개인과 단체가 소규모의 영리추구 단계에서 벗어나 기업화되고, 미국에서는 공유기업의 주식 가치가 커지면서 공유 본래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Schor, 2014). 공유경제의 기업화가 나타나면서 공정성이 약화되었고, 공유 기반의 경제활동이 포스트개발보다 신자유주의 개발에 가까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공유경제는 생각보다 저탄소경제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으며, 공유를 통한 사회적 결속의 강화를 보여주지 못하며, 저가격의 서비스 제공은 종사자의 노동착취를 야기하고,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 징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Baker, 2015).

본 연구는 포스트개발로 각광을 받고 있는 공유경제가 최근 신자유주의 개발담론에 포섭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시작되었다. 본 연구는 신자유주의 개발의 대안으로서 등장한 공유경제의 가치와 한계를 살펴보고, 포스트개발로서 공유경제의 미래를 모색하는데 목적을 둔다. 특히 공유경제를 주도하는 단체들이 거대한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으로 성장하면서 본래 공유경제의 본질이 어떻게 훼손되고 있으며, 향후 포스트개발과 지속가능한 개발로서 공유경제의 미래는 어떤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하는 지를 살펴본다.

본 연구는 다양한 관점과 사례에 대한 이론적 접근을 시도하며, 연구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2장은 신자유주의 개발의 상상력을 비판적 측면에서 고찰하고, 포스트개발 논의의 핵심을 살펴보고, 공유경제의 도입과 목표 등을 살펴본다. 3장은 공유경제의 성장과 변화를 가치와 의의에 초점을 두면서 설명하고, 4장은 공유경제의 기업화가 갖는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게 된다. 5장은 포스트개발로서 공유경제의 미래를 현 시장시스템의 개선을 통한 지속가능성이란 맥락에서 고찰하게 된다.

II. 개발담론의 상상력과 대안적 개발

1. 신자유주의 개발의 상상력

산업화를 거치면서 개발의 의미는 성장과 발전의 의

미를 갖게 되었으며, 일반적으로 개발에서 지향하는 메타포는 근대화, 경제성장, 역량강화, 인간능력의 확대 등이었다(Williams *et al.*, 2009). 케인스주의 시대의 개발은 성장을 위한 후진성의 극복에 초점이 두어졌고(Potter *et al.*, 2012), 개발은 전 세계가 추구할 과제와 발전 방향으로 제시되었다.

신자유주의 시대에 접어들어 개발은 생산성 향상과 관련되었고, 시장원리와 개인책임이 강조되었다(이용균, 2014). 신자유주의 개발은 시장원리의 정당화와 이를 통한 성장효과관 측면에서 상상되었다. 시장은 개인과 사회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 방법이며, 시장을 통한 경쟁은 사회발전과 사회문제 해결의 지름길이며, 시장은 사회 전반의 생산성 향상을 가져오면서 누구나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상상력을 강조하였다(유강은 역, 2012; 임동근 등 역, 2010).

시장원리는 사회가 추구할 최고의 가치로 주장되었다. 개인과 사회는 규제가 완화된 자율 경쟁 속에서 최고의 역량을 발휘하게 되고, 이는 사회적 부의 확대로 이어진다고 인식되었다. 생산성 향상은 임금상승과 고용창출로 이어지면서 사회적 부는 더욱 확대되고, 개개인도 부를 창출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과 창의적 아이디어를 동원한다는 것이다. 즉, 시장원리는 사회발전을 위한 최고의 시스템이자 현 사회가 지향할 최고의 가치로 인식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신자유주의 시장 정당화 담론은 많은 문제점을 담고 있다. 시장이 사회의 출발점이자 시장이 사회가 지향할 최종의 목적지가 되고 있다(김현미 등, 2010). 기존의 사회가 추구하였던 사회적 연대와 사회복지의 축소되었고, 시장이 이들의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다. 하지만 시장원리는 개인의 발전과 부의 창출보다 자본가와 지배집단의 이익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작동되고 있다(최병두 역, 2007). 1970년대 서구가 경험한 경제침체와 인플레이션은 지배집단의 수익에 대한 위기감으로 다가왔고, 시장원리를 통한 근로국가(workfare state)의 건설은 지배집단의 이익과 이해관계를 관철시키기 위한 수단이었다.

자본가와 지배집단은 강성 노조보다 유순하고 창의적이고 근면한 노동력을 선호하였다. 노동자 개인의 부가 확대된 것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 반면에, 지배집단의 이익은 커지게 되었다. 노동자로서 개인은 시장원리 속에서 더 많은 착취를 경험하게 되었으나, 분배는 한정된 범위

내에서 경쟁적으로 전개되었다(최병두, 2012). 시장은 개인의 자유가 최고로 보장되는 시스템이 아니라 권력이 형성되어 구속과 억압이 존재하고, 자유보다는 권력에 의해 시스템이 작동되는 현상이 되었다.

국가는 시장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개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배집단의 편에서 있게 되었다(이용균, 2015). 사회 전반의 복지가 축소되면서도 지배집단을 위한 서비스는 확대되었고, 지배집단의 요구에 맞춰 개발 계획이 수립되고, 국제 간 무역협정이 체결되고, 노동자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졌다(최병두 역, 2007). 이처럼 사회 전체가 신자유주의 시장원리를 강조하게 된 것은 지배집단에 의한 이데올로기가 사회 시스템 속에서 체계적으로 작동되는 효과를 보였기 때문이다. 누구나 노력하면 최고가 될 수 있다는 분위기, 다른 사람의 성공 신화가 나의 성공 신화처럼 상상되는 분위기는 신자유주의가 추구하는 사회 작동의 메커니즘이었다.

이처럼 신자유주의가 거부할 수 없는 사회의 가치관으로 자리잡게 된 것은 성장효과의 분배에 놓여 있다. 신자유주의 논리에 의하면, 케인스주의의 사회복지의 개인의 복지를 강조하나 개인이 원하는 만큼의 복지를 가져다주지 못하고, 정부의 누적된 재정적자는 결국 복지수준을 악화시킬 것이라 주장되었다(이용균, 2014). 개인의 책임이 수반되는 시장원리는 적절한 경쟁을 유발하면서 자기개발을 부추기고, 개인의 권리와 진정한 의미의 복지실현을 가능하도록 한다고 본다. 시장원리는 개인의 소득과 복지를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이끌면서 궁극적으로 개인과 사회의 균형된 발전을 가져온다고 본다.

하지만 신자유주의 시스템 속에서 개인 간,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탈규제와 민영화는 다수의 희생 속에 소수의 부를 충족시키는 시스템으로 변모하였다. 시장을 통한 경쟁은 자본과 권력을 가진 사람, 지역, 국가에 유리한 시스템으로 작동되고 있다. 시장원리는 교육, 인프라, 기술 및 자본이 집중된 개인, 지역, 국가로 부의 분배가 집중되고, 새로운 투자와 개발은 이미 부가 축적된 계급, 지역, 국가에 더욱 집중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신자유주의 분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단순히 많게 분배되고 적게 분배되는 것이 아니라, 분배에 내재한 불균등 때문이다(박선미·김희순, 2015; 주성수 역, 2010; 조효제 역, 2013). 신자유주의 시스템 속에서 분배의 부

족은 인간이 추구할 권리를 실현할 역량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자본과 권력이 부족한 계급, 지역 및 국가는 생산과 분배시스템의 하위 영역에 대한 생산과 분배를 담당하게 된다. 즉, 신자유주의는 케인스주의 시대에 하위계급, 저개발지역, 개발도상국에 할당되었던 소득과 복지의 몫이 상당 부분 상위계급, 발전지역, 선진국으로 이동되는 결과를 가져왔다(조효제 역, 2013).

2. 포스트개발

포스트개발은 기존의 개발담론에 대한 대안적 발전과 반-발전을 지향하면서 두 가지를 지향하는데, 하나는 개발과 분배에 대한 현실적 개선을 강조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미래사회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이용균, 2015).

첫째, 현실의 개선과 관련하여 포스트개발이 지향하는 것은 개발을 ‘발전’, ‘성장’, ‘진보’로 인식하는 것에 대한 거부이다. 이러한 것으로 개발을 인식할 경우, “계획가, 정치인 및 행정가는 이해집단을 위한 정책수행을 통한 반사이익을 기대”하므로(이용균, 2014: 153), 결국 개발은 폭력과 탈인간화를 가져온다고 본다(Gregory *et al.*, 2009). 포스트개발론자들은 서구와 글로벌 북부의 개발담론이 식민주의의 연장이라 인식한다(이희재 역, 2010). 서구와 글로벌 북부는 이성, 지식, 지혜의 중심으로 인식하고 글로벌 남부는 무지, 야만, 감정적 이성의 중심으로 인식하는 것은 개발을 이해하는 진정한 자세가 아니라고 비판한다(Lawson, 2007). Gustavo Esteva는 서구의 개발담론은 (신교전)경제학자들에 의해 주도되면서 과학적 방법으로서 경제를 설명하고, 경제(개발)는 사회적 진리로 수용되면서 일상을 지배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이희재 역, 2010). 경제는 사회의 모든 규칙보다 중요하게 인식되었는데, 경제적 가치를 확립하는 과정에서 사회·문화적 가치는 평가절하 되었다.

이러한 경제 우위와 성장 중심의 개발담론에 대해 포스트개발론자들은 역사적, 사회적 맥락과 상황을 고려한 발전을 지역수준에서 이해하고자 한다. 포스트개발은 빈곤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볼 것을 강조하는데, 빈곤의 원인은 개인 탓도 있으나 사회의 권력관계 시스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조효제 역, 2013; Lawson, 2007). 빈곤은 권력 부재의 상태로 인간의 통제 능력을 거부당한 상태에서 나타나며, 결국 불평등과 불균등한 권력 관계

의 결과이다. 현재 글로벌 남부의 빈곤은 글로벌 북부와 권력 관계에서 하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포스트개발론자들은 현재의 신자유주의 시스템은 권력관계를 토대로 지배계급의 부를 확대하고 하류계급과 개발도상국의 빈곤을 확대할 것으로 본다. 이용균(2015)은 현재의 빈곤 상태는 인간의 권리를 실현할 역량을 훼손시키며, 빈곤으로 야기된 불평등 상태는 개인의 재능뿐 아니라 사회의 유대를 약화시키면서 빈곤의 세대 간 대물림을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한다.

Escobar(1995)는 서구의 개발담론이 빈곤을 문제로만 간주하는 것에 대해 회의적이며, 빈곤의 해결 방안으로 경제성장을 강조하는 것에 대해 비판적이다. 빈곤은 권력관계에 의해 현재 개개인 이 처한 상대적 상황일 뿐이며, 가난과 굶주림이 빈곤과 동일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전 지구적 차원에서 볼 때 글로벌 남부의 빈곤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북부의 과잉소비가 문제가 된다. 또한 현재 글로벌 남부의 빈곤을 글로벌 북부에 의한 폭력적 교환에서 찾지 않고 글로벌 남부의 경제적 비효율성에서 찾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다.

둘째, 포스트개발은 미래의 관리로서 지속가능성을 강조한다. 이는 배제된 계급, 지역 및 국가에 대한 가치를 존중하고, 지배집단의 욕망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데올로기에 반대하며, 희생자 계층이 필요했던 사회담론에 대한 반성을 시도하는 것이다. Spivak이 언급하듯이 경제개발은 인류의 발전과 동일한 의미로 해석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최민경·이태주 역, 2013). 지속가능성과 관련하여 포스트개발에서 강조하는 것은 인간 지향적 경제발전, 인류의 지속성과 지구의 지속성을 강조하는 안전성, 인류·장소·국가의 소통을 통한 개발이다(이용균, 2015).

Wolfgang Sachs는 개발담론에서 벗어난 개발의 사례를 태국의 ‘자급경제’ 시스템, 인도의 ‘지구 민주주의’ 시스템, 페루의 ‘안데스 세계관’,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탈성장 운동’에서 찾고 있다(이희재 역, 2010). 지역마다 개발의 방향은 다르게 실천되어야 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은 하나의 모델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마다 다른 모델이 필요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하나의 개발 시스템이 아니라 다양한 개발시스템이 역사적, 사회적 상황과 맥락에 따라, 즉 자유로서의 발전을 고려하여 실천되어야 한다(김원기 역, 2013).

3. 공유경제

인류의 공존, 협력, 지속가능성을 강조하는 공유경제는 포스트개발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 옥스퍼드 사전에 의하면 공유란 “많은 사람들이 함께 나누거나 많은 사람에게 기여하는 일부 또는 부분”을 의미한다(Oxford Dictionary, 2015). 공유는 공유지의 문제와 공유의 본질 회복, 공동체주의로서 사회의 공동선 추구 등과 관련하여 사회적 주목을 받았다(강병준·최무현, 2013).

공유경제는 보다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경제 실현을 위한 시민운동으로 출발하였다(Schor, 2014). 공유경제는 사회적으로 많이 사용되지 않는 자산이나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이용, 공유 및 교환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전통경제가 개인의 소유를 통한 경제활동을 강조한다면, 공유경제는 사회의 공유를 통한 경제활동을 강조하며, 자원에 대한 소유보다 자원에 대한 접근성(accessibility)을 강조한다(조용수, 2015).

공유제도와 공유경제는 최근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시대 이전에 세계 곳곳에 존재하였다. 우리나라의 품앗이나 중고 물건을 교환하는 아나바다 운동도 공유경제에 속한다(김점산 등, 2014). 현대적 의미의 공유경제는 하버드 대학의 Yochai Benkler 교수가 처음 사용했는데, 그는 인터넷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가치를 창출하는 일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활동을 공유에 기반한 동료 생산(common-based peer production)이란 용어로 사용하였다(Benkler, 2004). 그 이후 공유경제는 개인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자주 사용하지 않는 자산을 서로 공유 또는 교환하는 시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구체화되었고, 이는 금전적 또는 비금전적 이익을 위한 재화와 서비스의 공유 또는 교환과 관련된 제 활동을 포함하게 되었다(Koopman *et al.*, 2014). 공유경제와 비슷한 용어로는 협력적 경제(collaborative economy), 협력적 소비(collaborative consumption), 동료-생산 경제(peer-production economy), 동료경제(peer-to-peer economy) 등이 있다(Koopman *et al.*, 2014).

공유경제는 사용자-공급자-사회 간 연대와 협력적 소비를 통한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지향한다. 사용자는 저렴한 가격에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공급자는 유휴자원의 수입을 기대할 수 있고, 사회는 자원과 생산의 감소 및 환경문제의 해결을 추구할 수 있다(김점산 등, 2014). Schor(2014)는 사회에서 공유경제가 필요

하다는 논리를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측면에서 종합하고 있다. 공유는 개인 대 개인을 연결하면서 사회적 연결성을 강화하고, 신규사업의 진입비용이 저렴하고 싼 값에 재화와 서비스의 구매·교환이 가능하고, 자원의 집약적 사용이 약화되면서 친환경적 개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유는 서울과 같은 지방정부가 도시발전의 목표로 제시할 만큼 긍정적인 상징성을 내포하며, 인터넷과 휴대전화라는 신기술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혁신적이며, 사회적으로 친목이나 동호회와 같은 공유활동을 자극한다는 점에서 고무적으로 평가된다(Schor, 2014). 또한, 공유경제나 공유활동은 대기업에 의해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공유기업에 소속된 서비스 공급자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소비자의 관심이 높는데, 이는 대기업이 주도하는 시장 경제시스템에 대한 불만이 사회적으로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Marshall, 2015).

공유경제는 경제성장 및 경제침체의 어떤 시기에도 적절한 경제 시스템이며, 소비를 통한 사회적 자본의 형성, 친환경적 개발에 의한 인류의 미래 발전에 대한 청사진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개발이다.

III. 공유경제의 성장과 가치

1. 공유경제의 성장

세계의 곳곳에서 자본주의 시대 이전에 개인 간 거래가 중심이 된 경제가 존재하였다(Marshall, 2015). 인류가 공동체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물건과 서비스의 공유는 사회를 지탱하는 핵심이었다. 우리나라의 미풍양속이 공유에 기반하고 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스위스와 일본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고산 시대 목초지와 산림은 지역사회가 공유하는 경향이 있었고, 에스파냐의 발렌시아 일대는 관개용수의 공유 체계가 15세기부터 제도적으로 확립되어 있었으며, 필리핀도 일찍부터 관개 기술과 시설을 공유하고 있었다(윤홍근·안도경 역, 2010). 인류는 자원, 도구, 인프라에 대한 소유가 가능했지만 공동으로 관리하면서 지역사회의 유지와 발전을 꾀하였다(조용수, 2015). 그러나 일부 공유지(산림, 갯벌, 하천, 들판 등)는 누구나 공유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공

표 1. 공유경제의 구분과 주요 기업의 사업 내용

구분	주요 기업	사업 내용
숙박	Airbnb	- 2008년 방을 공유하는 비즈니스 시작 - 2013년 전 세계의 연간 이용자 수 400만 명 돌파 - 차별화된 비즈니스: 숙박-식당-여행을 연계한 글로벌 차원의 서비스 제공 - 기업 자산의 가치가 100억 달러로 성장
교통	Zipcar	- 2000년 시간제 렌트 서비스로 비즈니스 시작 - 차별화된 비즈니스: 사용 시간과 이동 거리로 비용 산정 - 2013년 Avis에 인수 합병(4.9억 달러)
	Uber	- 2009년 플랫폼 기반의 택시 서비스 제공(20% 수수료) - 차별화된 비즈니스: 유연적 근무시간 - 2013년 기업 자산의 가치가 180억 달러로 성장
중개업	TaskRabbit	- 2008년 보스톤에서 설립 - 차별화된 비즈니스: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중개 - 2013년 3,500만 달러의 벤처 캐피탈 확보
금융	Lending Club	- 2006년 플랫폼 기반의 금융(대부)서비스 제공 - 차별화된 비즈니스: 낮은 이자율의 개인 간 신뢰 기반의 서비스 제공 - 2013년 연간 13억 달러가 거래

자료 : Demailly and Novel, 2014; Marshall, 2015; Schor, 2014의 내용을 토대로 저자 정리.

유지가 파괴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공유지의 파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개인의 가치를 보장하는 소유의 시스템이 강조되는 결과를 가져왔다(윤홍근·안도경, 2010).

공유는 유희자원의 사회적 활용을 강조하는데, 공유 활동이 수익과 연결되면서 공유경제가 파생되었다. 공유경제는 자주 사용하지 않거나 유희 자산인 자동차, 빈방, 의류, 액세서리, 노동력, 돈, 지식 등을 공유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시스템이다. 공유경제의 효시는 1995년 물건의 판매를 인터넷으로 중개한 eBay와 Craigslist로 간주된다. 이들 회사의 특징은 인터넷 기반의 중개를 한다는 것으로 공유경제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인터넷을 이용한 저렴한 거래비용에 기초하여 대두되었다(Demailly and Novel, 2014).

Easysms는 하루 평균 247,000의 아이템을 판매하고, 하루 평균 Airbnb에서 제공하는 숙소를 이용하는 사람은 140,000명에 이르며, Uber의 하루 평균 이용자는 1,000,000명으로 추산된다(Marshall, 2015).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에 따르면 2013년 공유경제는 전 세계적으로 약 260억 달러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예상된다(Marshall, 2015). 세계적 회계 및 컨설팅 업체인 PwC(PricewaterhouseCoopers)는 2015년 공

유경제의 핵심 5개 영역(대부, 구직, 숙박, 택시, 음악과 비디오)은 150억 달러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상하며, 2025년에는 이들 5개 영역에서 공유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5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PwC, 2015). 특히 이자율이 낮은 개인과 개인 사이의 대부(대출) 서비스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표적 공유기업으로는 Airbnb, Uber, Zipcar, TaskRabbit, Lending Club 등이 있다(표 1). Airbnb는 빈 방을 공유하는 공유기업으로 2008년에 비즈니스를 시작하였고, 2013년 전 세계적으로 이용자 수가 약 400만 명에 이르며, 숙박-식당-여행을 연계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급성장하고 있다. Zipcar는 2000년에 창업한 시간제 렌트카 서비스로 2013년 렌트카의 대표적 기업인 Avis에 4.9억 달러에 매각되었다. Uber는 휴대전화 기반의 택시 서비스로 2009년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TaskRabbit는 2008년 보스톤에서 설립된 공유기업으로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중개한다. Lending Club은 2006년에 설립된 개인 간 대출업체로 2013년에는 총 13억 달러가 교환되었다.

최근 한국에서도 공유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시는 2012년 ‘공유도시 서울’을 선언하면서 함께 나누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공유도시를 지향하

고 있다. 서울시는 현재 물건, 장소(공간), 인간, 시간, 정보로 구분된 20개의 공유도시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세계적 관심을 모으고 있다. 또한, 광주광역시를 비롯하여 공유를 지향하는 도시 차원의 서비스 제공이 주목을 받고 있다.

국내 공유기업도 최근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대부분 자본금 1억 미만 운영자 5인 미만의 창업 형태이다(김점산 등, 2014). 물건 대여, 여행 정보 및 가이드, 개인 간 대출, 물건 공유, 식사모임 등과 관련된 공유가 확대되고 있다. Airbnb 형태의 공유기업인 '코자자'는 2013년부터 한옥, 일반주택의 공유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 공유경제의 가치

2008년 미국과 유럽의 금융 및 경제위기는 저소득층의 수입 감소로 이어졌고, 이는 절약형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Schor, 2014). 공유경제는 한 번 생산된 제품을 여러 번 공유하는 협력적 소비를 가져오고(Lessing, 2008), 사용자가 원하는 틈새시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장점을 갖는다. 공유경제는 유희자산을 수입으로 전환시키는 경제 활동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한다(조용수, 2015). 이러한 공유경제의 가치를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유경제의 경제적 가치는 협력과 공유에 따른 재화와 서비스 사용의 변화에서 찾을 수 있다. 제품의 공유는 한 제품의 사용 기간을 늘리는 효과를 가져온다. 제품의 사용 기간이 길어지면 제품에 대한 생산이 감소하고, 이는 자원 소비의 감소로 이어진다. 프랑스 국립통계경제연구소(INSEE)에 의하면, 2012년 프랑스의 각 가정이 소비하는 돈의 약 25%는 공유가 가능한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지출이다(Demaiily and Novel, 2014). 만약 이들 제품과 서비스가 공유되어 내구재의 사용 기간이 2배로 늘게 되면, 가구당 지출의 10%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Demaiily and Novel, 2014).

공유경제는 자본의 생산적 이용을 가능하게 한다(Koopman *et al.*, 2014). 제품과 서비스의 공유는 덜 사용되거나 사용하지 않는 자본의 생산적 이용을 가져온다. 또한 공유는 거래비용이 저렴하고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범위의 경제(economies of scope) 효과가 발생한다. 또한, 범위의 경제는 다양한 공급자-사

용자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공급자 간 경쟁을 유발하고, 전문화된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충족시킬 수 있는 전문화(specialization)의 효과도 가져온다. 공유경제의 생산자-소비자 관계는 투명한 정보에 기초한다는 점에서 현재 신자유주의 시스템의 불투명하고 자본가 중심의 생산이 내포하는 문제와 비교되는 장점을 갖는다(Koopman *et al.*, 2014).

공유경제는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면서 생산과 가치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자본의 생산적 이용을 가져온다. 공유경제는 기존의 시장에서 시장성이 낮다고 평가 받았던 아이디어·경험·창작이 새로운 수익창출의 수단으로 작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정규 및 비정규직의 형태로 생산 활동에 참가하기 힘들었던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처럼 공유경제가 활성화되면 제품과 서비스의 다중 사용에 따른 생산 대체효과가 발생하고, 이는 제품에 대한 소비의 감소로 이어지면서 사회적으로 필요한 만큼만 생산하면서 자원 사용을 줄이고, 희소성에 근거한 경제성장 위주의 개발을 지양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둘째, 공유경제의 사회적 가치는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역할에서 찾을 수 있다. 개인이 자원을 소유하는 배타적 상황보다 상호 간 공유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구계원 역, 2011). 공유는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도록 하면서 사회적 유대감이 사회 전반에 걸쳐 강화되는 효과를 가져 온다(강병준·최무현, 2013). 인터넷과 휴대전화를 통해 공유자원의 사용에 대한 접근성이 증대되면서 공유는 현재의 개인주의 사회 체계에 따른 고립, 단절, 외로움과 같은 문제를 개선하는데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온다.

Putnam(2000)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사회적 자본이 쇠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클럽과 친목단체의 활동이 약화되고, 공동체에 대한 불신이 증가하고, 정치적 관심과 참여가 줄어들면서 사회적 연대가 약화되었다. 특히 신자유주의가 확대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 단위로써 이웃이 갖는 의미가 약화되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도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구계원 역, 2011). 단순히 온라인 공동체만으로는 오프라인 공동체 결속의 약화를 만회할 수는 없다.

자본주의 생산이 확대되면서 서구와 글로벌 북부는 장인 시스템이 붕괴 되었고, 마을 단위의 결속과 도덕적 관행도 약화된 것이 사실이다. 또한 통근과 통학의 거리

가 멀어지고 자동차 중심의 이동에 익숙해지면서 공동체의 연대는 약화되고 사생활의 보호는 더 강화되었다. 바쁜 일상의 연속 속에 기존에는 지역사회에 의존하던 돌봄 등의 서비스를 외부로부터 구입하게 되었고 결국 지역사회와의 연대는 약화되었다. 노동 현장에서 업무의 증가와 스트레스는 이웃, 친척, 친구에게 베풀었던 서비스를 가족에 국한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구계원 역, 2011).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서구와 글로벌 북부의 사회적 연대는 많이 약화되었다.

비록 공유경제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제품과 서비스의 공유와 교환은 근거리에서 발생하고 있다(Demilly and Novel, 2014). 공유가 사회적 자본의 회복을 가져오는 직접적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더라도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경제적 활동이 전개되고, 지역에 대한 배려가 제고된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셋째, 공유경제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가치는 환경과 관련된 것이다. 공유는 대량생산의 의존도를 약화시키는 효과를 가져 온다. 인간이 자연의 일부가 아니라 자연과 분리된 존재라는 시각은 근대과학을 지배했던 그리스도교의 관점과 연계된다(이영만·이종희 역, 2013). 그리스도교에서 자연은 신에 의해 창조되고 다스려지는 곳으로 이해하는데, 인간은 신을 대신하여 자연에 대한 통치권을 갖고 있다고 인식한다. 이러한 서구 관점은 개발의 대상으로서 자연을 상상하게 되었다.

Vandana Shiva에 의하면, 자원을 의미하는 영어 resource는 라틴어 surgere에서 파생된 것으로 '대지의 봄 기운'을 의미한다(이희재 역, 2010). 자원은 소모되지 않고 되살아나는 자기재생의 힘을 갖는 대상으로 인식하였다. 그러나 산업사회에서 자원의 수탈이 심해지면서 환경위기가 고조되었다. 공유경제는 공유되는 재화가 많아질수록 생산의 감소에 따른 환경문제를 줄이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교통부문의 공유는 불필요한 교통유발을 줄이면서 교통비용의 최적화를 통한 환경오염을 줄이는 것으로 간주되었다(Demilly and Novel, 2014).

공유경제는 공급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환경적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할 것으로 기대된다(Koopman et al., 2014). 자연 자원(자산)에 대해 공유가 필요한 이유는 인간 개개인의 자연에 대한 기술이 부족하고 정보 공유를 통해 친환경적 지식과 기술을 더 확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구계원 역, 2011). 생태적 토지 이용은 땅을 되살리고, 이를 통한 경제적 이익과 삶의 질적 향상도 가져온다.

IV. 공유경제의 기업화

공유경제가 사회적 관심을 가지면서 성장 일변도의 개발에서 협력 기반의 포스트개발이 실현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게 하였다. 공유는 '어떤 것의 상거래 형태'를 의미하는 상업화(commercialization)를 동반하는데, 공유가 상업화되는 것 자체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있다. 하지만 최근 공유기업이 성장하면서 상업화를 넘어 '이익을 목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화(corporationalization)의 단계로 변모하고 있다. 기업화는 공유가 영리적 목적으로 작동하기에 원래 공유의 본질이 훼손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공유경제의 기업화는 포스트개발의 이미지보다 기존의 개발담론과 유사한 면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공유경제 기업화의 문제를 시장 포퓰리즘, 노동, 소비자 보호, 사회적 자본, 권력의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공유경제에 참여하는 개인과 단체가 기업의 형태로 변화하면서 공유의 본질이 퇴색되고 시장 포퓰리즘이 공유경제로 확대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Marshall(2015)은 공유경제에 기업이 개입한다는 자체가 공유경제의 진정성을 잃게 하는 것이라 주장한다. 공유경제의 시장 포퓰리즘이 확대된 배경은 2008년 미국과 유럽의 금융 위기와 맥락을 같이 한다. 긴축재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공공서비스의 지원을 축소하였고, 문화시설을 포함한 공공부문의 시장 포퓰리즘이 확대되었다(모로조프, 2015). 같은 시기에 공유경제에서 추구하던 공유는 개인적(또는 소규모) 수준의 서비스 제공에서 기업적(또는 대규모) 수준의 비즈니스로 변모하게 되었다.

공유의 대명사로 각광을 받았던 방과 승용차를 공유하자던 Airbnb와 Uber는 '공유'보다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공유기업으로 변모하였다. 공유경제는 인터넷과 휴대전화에 기반하는 플랫폼에 의존하므로 구조상 독점의 가능성이 있다(Demilly and Novel, 2014). Airbnb와 Uber가 초기 서비스를 시작할 때 대중의 많은 관심을 받았고, 신규 서비스로서 대중에게 각인되는 효과를 가졌기에 이들의 기업화는 시장 독점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공유경제는 플랫폼을 이용하므로 거래의 투명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되었으나, 실제 공유기업들은 수입, 고객, 운영 등과 관련된 정보를 블랙박스로 간주하고 있다(Robinson, 2014). 독점은 기업과 개인으로 하여금 관련

된 기술의 확산을 제한하고, 새로운 기술과 지식 개발을 제한하며, 신규기업의 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역할을 한다(구계원 역, 2011).

공유경제의 기업화가 나타나면서 참여하는 기업의 세금이 주요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Baker, 2015). 초기 공유경제는 공유에 초점을 두었기에 공유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세금 징수에 큰 관심이 없었으나, 공유경제의 기업화가 나타나고 참여하는 기업의 수익 규모가 커지면서 세금 징수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인터넷을 이용한 거래가 발생하는 모든 지역의 모든 사업 참여자에 대한 세금 부과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미국의 경우 주마다 세금과 관련된 법과 제도가 조금씩 다른 등 일률적인 세금 부과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대규모의 공유기업이 소득을 신고하고 있으나,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참여자의 소득이 신고되는 것은 아니며, 신고의 의무도 불명확한 실정이다(Demilly and Novel, 2014).

공유경제의 기업화는 기존 시장체계의 질서를 혼란에 빠지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이는 다른 아닌 시장실패(market failure)에 해당한다. 이렇듯 공유경제의 시장실패를 가져온 대표적 사례는 Zipcar의 매각에서 찾아볼 수 있다. Zipcar는 2000년에 설립된 자동차의 시간제 렌트를 추구하는 공유경제의 대표적 서비스 제공자였다. 2008년 이후 Zipcar의 이용이 증가하면서 시간제 자동차 렌트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자 렌트카의 대표 기업인 Avis는 인수를 제안하였고, Zipcar는 약 5억 달러의 가치에 매각되었다(김철산 등, 2014). 이는 공유기업의 본질이 진정한 자원과 서비스의 공유였는지를 의심하게 하는 사건이었고, 공유경제의 기업화가 몰고 올 파장의 한 면에 불과하다는 주장들이 제기되었다.

둘째, 공유경제와 노동의 관계가 뜨거운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공유경제의 기업화가 나타나면서 공유기업에 소속되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계약자인지 아니면 고용자인지에 대한 이슈가 제기되었다. 공유기업들은 자사에 소속된 사람들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만큼 일하기 때문에 고용된 상태로 보기는 어렵고 회사와 계약된 신분 상태로 인식한다(Baker, 2015). 현행 법과 제도는 공유기업에 소속된 종사자의 위치에 대한 명확한 구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공유 플랫폼을 통한 비즈니스에 대한 모니터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기에 공유기업에 소속된 종사자의 대우를 정확히 알기는 어렵다. 현재까지 조사된 결과들에 의하면, 공유기업에

소속된 종사자의 수입은 상당히 낮은 편이고, 수입의 발생도 불규칙하며,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대거 공유기업의 종사자로 일하는 경우도 많이 나타난다(Schor, 2014).

Malhotra and Alstynne(2014)는 실제 Uber에 계약된 종사자들의 수입은 기름 값과 차량 유지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Uber가 최근 계약자들의 수입 개선에 대한 노력을 시도하였으나, 여전히 기업 소속의 종사자들에게 신기술 교육, 의료보험, 퇴직연금과 같은 혜택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노동에 대한 임금이 자유로운 상황에서 프리랜서로 일한다는 것은 임금 결정에 대한 자유를 박탈당하는 것과 같다. Uber 소속의 기사가 교통사고를 낼 경우 사고의 책임은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것이 현재의 실정이다.

최근 공유기업에 풀타임으로 종사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은 현행의 법과 제도가 규정하는 고용자로 대우받을 권리가 있다. Baker(2015)는 일반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임금과 근로에 대한 규정이 공유기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면, 공유경제에 포함되려는 기업과 비즈니스 활동이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셋째, 공유경제의 기업화는 소비자(사용자) 보호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인터넷 플랫폼은 고객의 안전성이 높은 공유로 인식되었으나, 모니터링이 어렵다는 문제를 갖는다. 현재의 소비자 보호법은 공유경제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Baker, 2015). 현재 대부분의 국가는 택시 회사와 기사에게 안전 운행과 승객 보호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기사 교육, 기사의 신원, 택시의 정기 점검, 보험 등이 의무로 부과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이 공유기업에 그대로 적용되기는 힘든 실정이다.

독일은 최근 Uber 택시의 영업을 중지시켰다(Malhotra and Alstynne, 2014). 이유는 Uber에 소속된 운전자들이 전문적 운전면허 교육을 받지 않았고, 운전하는 자동차가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독일의 이러한 결정은 공유기업의 소비자 보호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Uber는 2014년 사고 당 100만 달러까지 보상하는 보험정책의 도입 계획을 발표하였다. 미국 내 18개 주에서 이 정책이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나, 아직 공식적으로 미국의 주정부 차원에서 공유기업에 대한 보험 규정이 어떻게 제도화될지 예측이 불가능한 상태이다(Marshall, 2015). Uber와 같은 기업에 어떤 종류

의 보험을 의무화하지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다. 인터넷을 사용하는 시장 접근이 전통경제의 방식과 다르고, 소속된 근로자의 상황이 다양하기 때문에 적절한 소비자 보호 관련법을 제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또한, 공유경제는 인터넷, 휴대전화 및 신용카드에 의존하므로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거나 신용카드가 없는 저소득층이나 일부 소수자에게는 급한 용무가 발생했을 때 사용하는데 제한이 따른다. 만약 Uber 택시와 기존의 택시회사가 경쟁하여 Uber만 살아남는다면 신용카드가 없는 사람들은 이용에서 배제될 수 있다. Uber 택시 이외에도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사항은 많이 언급되는데, 예를 들어 Airbnb에서 제공하는 숙소에서는 호텔이나 모텔과 같은 재난 및 응급 상황에 대한 준비가 갖추어지지 않는 등의 소비자 보호 이슈가 제기된다.

넷째, 공유기업의 기업화로 공유의 사회적 자본화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현재의 공유경제는 낯선 사람과의 관계에 바탕을 두고 있어 친밀감의 확대를 통한 사회적 자본으로 발전되기 힘들다(Schor, 2014). 공유기업들은 공유를 통한 사회적 연계가 강화되고 있다고 주장하나, 공유를 통해 친구관계, 네트워크, 사회적 신뢰가 증대되었다고 보기 힘들다. 공유경제의 기업화로 인해 파생되는 관계는 친밀함보다는 상업적 목적의 관계에 국한되는 경향이 있다. 유저자원의 공유는 바람직하나 이러한 공유가 지나친 시장논리에 의해 작동되면 사회적 자본으로 기능하기 힘들게 된다.

유럽과 미국에서 빈 방을 공유하는 서비스의 수익성이 높아지면서 주택을 임대하던 사람들이 Airbnb에 소속되어 빈 방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Baker, 2015). 왜냐하면 주택의 임대보다 단기간의 빈 방의 숙소 제공이 더 많은 수익을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또한, 호텔이나 모텔의 영입이 금지된 문화재 보호구역 등에서 Airbnb 형태의 빈 방 제공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이용자에게는 편리한 점을 제공하지만, 기존의 사회 규제와 충돌하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처럼 공유는 친밀한 사회적 관계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나, 공유가 기업화되면 사회적 자본의 가능성은 축소되는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공유경제의 기업화는 유색인종과 소수자에 대한 차별의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Baker, 2015). 공유경제가 플랫폼에 의한 사용자 중심의 운영이란 점에서 차별이 적을 것 같으나 실재는 그렇지 않다. 미국에서 공유경제의 서비스 제공자 또는 이용자로서 참여하려는

흑인들에게 공유경제의 진입 장벽은 높은 편이다. Robinson(2014)은 흑인의 공유경제 진입장벽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시카고의 한 흑인 여성은 Airbnb 소속의 계약자로서 자신 아파트의 일부를 숙박에 사용하다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다. 흑인 여성이 불법으로 영업을 했기에 조사를 받은 것이 아니라 흑인들이 집중 거주하는 우범지역에서 서비스 제공을 했기 때문이다. 흑인의 집중 거주지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자체가 경찰 조사의 대상이 된다는 점은 사회적 차별과 편견의 일면을 보여준다.

공유경제는 현 시장 시스템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사회적 신뢰와 형평을 제고하는 유토피아적 모습을 강조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보여준 공유경제의 모습은 특권을 가진 계급이 중심이고 기타 집단은 배제되는 특징을 보인다. 현재의 공유시스템은 인종차별이 존재하거나 차별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Acquisti and Fong(2014)은 공유경제 내에서 성별 차별, 정치적 성향에 따른 차별이 존재함을 보여주며, Edelman and Fuca(2014) 연구는 Airbnb를 사례로 실제 인종차별이 존재함을 보여준다.

이처럼 공유경제는 흑인이나 저소득층 계급으로 하여금 참여 기회를 충분히 살리면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조성된 불평등과 직업 탐색의 불확실성 속에 빠지게 한다(Robinson, 2014). 공유경제에 참여하는 기업은 계약 근로자의 경험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에 맞춰 노동력을 구성할 뿐이다. 노동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공유경제의 확대는 흑인과의 계층에게 더 힘든 노동 조건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공유경제는 포스트개발이 아니라 기존의 일부 IT 관련 업종의 신화처럼 실리콘 벨리의 소득을 높여주는 새로운 수단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공유경제의 기업화는 신자유주의 개발의 논리를 추구하면서 개인 간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인종과 계급의 차별을 더 심화시킬 수 있음도 간과할 수 없다.

V. 포스트개발로서 공유경제의 미래

공유경제가 본래의 의미를 살리면서 포스트개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공유는 인류가 개발해 온 협력적 사회 운영으로 미래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임에 분명하다. 본

연구는 공유경제가 포스트개발로 거듭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공유경제가 정착될 수 있는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유희 자원의 사회적 공유와 교환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하며, 사회 구성원의 관심과 참여가 유발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공유경제의 기업화에 대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할 것이다. 공유경제의 공급자와 사용자에 대하여 세금, 노동, 소비자 보호 등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공유경제로 인한 법과 제도의 정비는 기존경제와 공유경제를 모두 다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공유경제 위주의 규정을 만들다보면 기존경제에 익숙한 기업이나 비즈니스 사업자가 적응하기 힘들 것이며, 기존경제 위주로 규정이 만들어진다면 현재와 같은 신자유주의 시장 시스템이 지속될 것이다(Marshall, 2015). 대부분의 중앙 및 지방정부는 현재의 기준에서 제도적 정비를 추진할 공산이 크다(Koopman *et al.*, 2014). 이는 공유경제의 확대와 이를 통한 포스트개발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경제를 규제하려는 근본 목적은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인데, 현재의 경제 규제는 기업을 보호하는 경향이 있다(Koopman *et al.*, 2014).

현재의 시장 시스템은 기업의 수익 창출이 높기 때문에 기존 기업들은 가급적이면 현재의 시장 시스템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현재의 시장 시스템은 권력적이고 정치와 긴밀한 관계를 갖는 지배집단이 시장실패를 가져오는 조절체계를 견고히 통제하고 있다. 즉, 현재의 시장 시스템은 가격은 상승시키고, 소비자의 선택은 축소시키고, 제공하는 서비스의 품질은 낮아지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따라서 포스트개발에 맞는 공유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공유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시장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인터넷 기반 공유경제 활동이 소비자의 수요와 만족도를 스스로 체크하면서 자기조절적 시장시스템을 형성하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공유경제는 다양하고 인터넷 기반의 활동이라 적당한 규제를 하기가 쉽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스트개발을 위한 공유의 활성화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사회의 노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공유경제가 포스트개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공유는 경제적 목적보다 사회를 위한 착한 행동에서 비롯된 실천이다

(조용수, 2015). 이를 위해서는 사용자가 공유의 본질을 이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Benkler(2004)가 주장하듯이 인터넷 상의 소프트웨어 공유, 지식 공유, 동영상 업로드 등은 금전적 이익보다는 삶의 즐거움과 사회를 위한 공유이다.

현재의 공유기업들은 공유라는 이름을 사용하지만 실체는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만 제공하는 경향이 있다.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공유경제의 실천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포스트개발 시민성의 실천은 공유를 통한 지역사회의 공동체 의식 함양, 단순히 소비보다 생각하는 윤리적 소비, 미래의 지속성에 대한 비전, 근로시간의 축소와 소규모 비즈니스의 증가를 통한 사회적 자본의 활성화를 통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구계원 역, 2011; 천경희 등, 2014).

공유경제의 공급자와 사용자 간 민주적 관계는 공유 실천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Marshall, 2015). 공유경제의 출발점은 사회정의를 위한 운동이다. 사회정의를 서로 공유하면서 고통, 기쁨, 행복을 나누고 무엇보다도 신뢰하는 사회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포스트개발이 왜 협력에 기초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가를 뒷받침한다.

셋째, 공유경제는 포스트개발이 지향하는 지구의 생태적 역량 회복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포스트개발은 단순히 공유를 통해 소비를 줄이는데 초점을 두지는 않는다. 사실 소비를 줄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녹색경제를 실천하는 것이다(구계원 역, 2011). 공유경제는 자원의 절약과 친환경적 기술과 지식의 공유를 통해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로컬로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 로컬경제의 위상이 높아지고 로컬의 문화가 사회적으로 존중되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유경제가 포스트개발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규모경제의 효과에 대한 재해석이 필요하다. 규모경제는 시장의 효율성과 자본축적의 기본 조건이다. 하지만 규모경제는 많은 자원과 소비를 지향하므로 환경과 도시문제를 야기한다. 규모경제와 관련하여 가장 큰 문제는 시장의 힘과 정치적 힘이 한 곳에 집중되어, 대기업의 경제적 역할이 지나치게 커진다는 점이다(구계원 역, 2011). 공유경제는 규모경제의 문제점과 한계를 대체할 수 있는 경제이자 이데올로기이다. 지구의 생태적 역량 회복을 위해 자연에 대한 공동 소유권이 존중되어야 한다. 현재의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과 재분배를 통한 빈부

격차의 해소보다 공동의 부를 통해 불균형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공동의 부는 공유자산의 올바른 사용에서부터 시작된다.

이상과 같이 공유경제는 포스트개발로서 인류가 추구할 지속가능한 미래 사회의 청사진을 보여준다. 하지만 공유경제의 기업화는 많은 문제를 양산하고 있고 공유의 본질을 되찾기 위한 사회의 노력이 요구된다.

VI. 결론

인류의 역사는 개발과 관련된다. 근대화와 산업화를 거치면서 개발은 성장을 의미하게 되었고, 신자유주의는 시장에 의한 경제적 효율성을 강조한다. 성장 위주의 개발과 시장 시스템은 기술혁신과 경제성장을 가져왔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친숙하고 편리한 사회 시스템이다. 하지만 신자유주의 개발은 분배와 지속가능성이란 측면에서 많은 문제를 양산해 왔다.

포스트개발은 성장 위주의 개발을 대체할 새로운 개발로 주목받고 있으나, 아직까지 신자유주의 시장 시스템을 대체할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공유를 통한 건전한 사회건설은 포스트개발의 실천 중의 하나로 주목을 받았다. 공유경제는 자주 사용하지 않는 재화의 공유와 교환을 통해 생산과 소비 시스템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를 모았고, 사회 구성원 간 판매와 교환을 통한 사회적 자본으로의 발전에 고무되었다. 또한, 공유경제는 친환경적 소비를 자극한다는 점에서 지속가능한 미래 사회의 건설에 고무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하지만 공유기업이 확대되면서 많은 문제가 나타났다. 공유경제의 기업화는 공유보다 수익창출과 보다 밀접히 관련되었고, 노동착취와 세금 징수의 문제가 나타났다. 열악한 노동 환경과 안전이 보장되지 못하는 서비스 제공은 소비자의 불만으로 나타났고,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인종차별도 이슈로 등장하였다. 이처럼 공유경제는 기대했던 만큼이나 많은 문제를 양산하면서 포스트개발로 인식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공유경제가 포스트개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공유의 본질에 대한 회복이 필요하다. 공유는 소유보다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한다는 것이 사회적 가치관과 이데올로기로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세금, 노동, 보험, 안전 등에 대한 법과 제도적 정비가 요구된다. 현재의 법

과 제도가 공유경제에 그대로 적용되는데 한계가 있다. 새롭게 정비되는 법과 제도는 전통경제와 공유경제에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포스트개발에 적합한 사회건설을 위해서는 보다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한 소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공유경제가 갖는 생태적 가치가 지속가능한 사회건설로 실천될 수 있는 사회적 메커니즘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포스트개발로서 공유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회 구성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해외에서 진행되는 공유경제를 중심으로 공유경제의 가치, 문제 그리고 포스트개발로서의 미래를 살펴보기에 국내에서 전개되는 공유경제와는 다소 다른 측면이 부각되었을 것이다. 국내 공유경제에 대한 구체적 사례연구를 통해 포스트개발로서 공유경제의 가치와 실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참고문헌

강병준·최무현, 2013, “공유경제의 전망과 과제에 대한 탐색적 연구,” 정책개발연구, 13(1), 143-170.

구계원 역, 2011, 「제3의 경제학: 세상을 바꾸는 착한 경제 생활」, 서울: 위즈덤하우스(Schor, J., 2010, *Plentitude: The New Economics of True Wealth*, New York: Penguin Press).

김원기 역, 2013, 「자유로서의 발전」, 서울: 갈라파고스 (Sen, A., 1999, *Development as Freedom*, New York: Anchor Books).

김점산·지우석·강상준, 2014, “공유경제(Sharing Economy)의 미래와 성공조건” 이슈 & 진단, 134, 경기개발연구원.

김현미·강미연·권수현·김고연주·박성일·정승화, 2010, 「친밀한 적: 신자유주의는 어떻게 일상이 되었나」, 서울: 이후.

모조로프, 2015, “우버화(Uberization), 디지털 공유경제의 함정,”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2015년 9월호.

박선미·김희순, 2015, 「빈곤의 연대기: 제국주의, 세계화 그리고 불평등한 세계」, 서울: 갈라파고스.

유강은 역, 2012, 「왜 신자유주의는 죽지 않는가」, 서울: 책임있는수요일(Crouch, C., 2011, *The Strange Non-Death of Neoliberalism*, Cambridge: Polity Press).

- 이영민·이종희 역, 2013, 「문화, 장소, 흔적: 문화지리로 세상 읽기」, 서울: 한울(Anderson, J., 2010, *Understanding Cultural Geography: Place and Traces*, London: Routledge).
- 이용균, 2014, “지역개발 패러다임의 변화와 미래 개발의 방향,” 한국지리학회지, 3(2), 147-158.
- 이용균, 2015, “서구 중심적 개발담론의 재해석과 지속가능한 개발로서 포스트개발의 미래,”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1(1), 137-152.
- 이희연·이용균, 2004, “인터넷의 확산에 따른 디지털 격차와 공간구조의 변화,”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0(2), 407-427.
- 이희재 역, 2010, 「반자본 발전사전」, 서울: 아카이브(Sachs, W., 2009, *The Development Dictionary: A Guide to Knowledge as Power*, London: Zed Books).
- 임동근·박훈태·박준 역, 2010,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공간들」, 서울: 문화과학사(Harvey, D., 2005, *Spaces of Neoliberalization: Towards a Theory of Uneven Geographical Development*, Stuttgart: Franz Steiner Verlag).
- 조용수, 2015, 오래된 미래 ‘공유경제’: 개방성과 시장원리로 세상 바꾼다, LGERI 리포트.
- 조효제 역, 2013, 「거대한 역설: 왜 개발할수록 불평등해지는가」, 서울: 교양인(McMichael, P., 2011, *Development and Social Change: A Global Perspective*, 5th ed., London: Sage).
- 주성수 역, 2010, 「빈곤에서 권력으로: 국가와 시민은 어떻게 빈곤과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을까」, 서울: 이매진(Green, D., 2008, *From Poverty to Power: How Active Citizens and Effective States Can Change the World*, Dorset: Oxfam International).
- 천경희·홍연금·윤명애·송인숙, 2014, 「윤리적 소비의 이해와 실천」, 서울: 시그마프레스.
- 최민경·이태주 역, 2013, 「개발학자 17인, 국제개발을 성찰하다」, 서울: 아르케(西川潤, 下村恭民, 高橋基樹, 野田真里, 2011, 開發を問い直す: 転換する世界と日本の国際協力).
- 최병두, 2012, 「자본의 도시: 신자유주의적 도시화와 도시정책」, 서울: 한울.
- 최병두 역, 2007, 「신자유주의: 간략한 역사」, 서울: 한울 (Harvey, D., 2005, *A Brief History of Neoliberalism*,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한국국제협력단, 2013, 「국제개발협력의 이해」, 서울: 한울.
- Acquisti, A. and Fong, C., 2013, An experiment in hiring discrimination via online social networks, available at SSRN: <http://ssrn.com/abstract=2031979>.
- Baker, D., 2015, “The opportunities and risks of the sharing economy”, Written Testimony for the hearing on “The Disrupter Series: How the Sharing Economy Creates Jobs, Benefits Consumers, and Raises Policy Questions,” the U.S. House of Representative.
- Benkler, Y., 2004, Sharing nicely: on sharable goods and the emergence of sharing as a modality of economic production, *Yale Law Journal*, 114, 273-358.
- Demailly, D. and Novel, A.-S., 2014, *The Sharing Economy: Make it Sustainable*, Paris: IDDRI Studies 13.
- Edelman, B. and Luca, M., 2014, *Digital Discrimination: the Case of Airbnb.com*, Boston: Harvard Business School.
- Escobar, A., 1995, *Encountering Development*,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European Union, 2013, *The Sharing Economy: Accessibility Based Business Models for Peer-to-Peer Markets*, European Union.
- Gregory, D., Johnston, R., Pratt, G., Watts, M., and Whatmore, S. eds., 2009, *The Dictionary of Human Geography*, Chichester: Wiley-Blackwell.
- Lawson, V., 2007, *Making Development Geography*, New York: Hodder Arnold.
- Lessing, L., 2008, *REMIX: Making Art and Commerce Thrive in the Hybrid Economy*, New York: Penguin.
- Koopman, C., Mitchell, M., Thierer, A., 2014, *The Sharing Economy and Consumer Protection Regulation: The Case for Policy Change*, Mercatus Working Paper, Mercatus Center at George Mason University, Arlington, VA, December 2014.
- Malhotra, A. and Alstyne, M., 2014, Economic and business dimensions: the dark side of the sharing economy... and how to lighten it, *Communication of the ACM*, November 57(11), 24-27.
- Marshall, P., 2015, *Issue: The Sharing Economy*, Sage

- Business Researcher.
Oxford University Press, 2015, *Oxford Dictionary*, Oxford (<http://www.oxforddictionaries.com/>, 접속일자 2015년 11월).
- Potter, R., Conway, D., Evans, R., and Lloyd-Evans, S., 2012, *Key Concepts in Development Geography*, London: Sage.
- Putnam, R., 2000,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New York: Simon and Schuster.
- PwC, 2015, *The Sharing Economy*, Consumer Intelligence Series, PwC. (<http://www.pwc.com/us/en/industry/entertainment-media/publications/consumer-intelligence-series/assets/pwc-cis-sharing-economy.pdf>).
- Robinson, R., 2014, Virtual redlining and the myth of opportunity in the sharing economy, Position Paper, the Open Society Foundation.
- Schor, J., 2014, *Debating the Sharing Economy*, Great Transition Initiative (October 2014).
- Sidaway, J., 2014, Post-development, in Desai, V. and Potter, R. eds., *The Companion to Development Studies*, third edition, London: Routledge, 147-151.
- Simon, D., 2006, Separated by common ground? Bringing (post)development and (post)colonial together, *The Geographical Journal*, 172(1), 10-21.
- Williams, G., Meth, P., and Willis, K., 2009, *Geographies of Developing Areas: the Global South in a Changing World*, London: Routledge.
- 교신 : 이용균, 500-757,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이메일: yonggyunlee@hanmail.net)
- Correspondence : Yong Gyun Lee, 500-757, 77 Yongbongro, Buk-gu, Gwangju, Korea,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College of Educati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Email: yonggyunlee@hanmail.net)

투 고 일: 2015년 11월 6일

심사완료일: 2015년 12월 6일

투고확정일: 2015년 12월 7일